



건설협회 도회 3·1절 달리기대회 참가 대한건설협회 도회 오인철 회장과 임원 등이 18일 도회 현관 앞에서 3·1절 기념 경축 단축마라톤대회 및 제17회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참가와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권태명기자

지방도 정비 2025년까지 4992억 투입

도로 확포장·선형 개량

강원도가 오는 2025년까지 총 4992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도로기능 향상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499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2020년까지 1단계로 매년 344억원, 총 17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지방도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함께 주요 고갯길 터널화, 선형불량

구간 개량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획일적인 도로 확·포장 개념에서 벗어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 기능 향상과 예산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복지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지방도 노선에는 아직까지 정비해야 할 구간이 많이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강릉시, 1907억 조기집행

강릉시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을 60%로 설정, 1907억원 조기 집행에 나선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권고한 목표액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시는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김철래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의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입찰제도 운영,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등 다양한 지원시책도 시행키로 했다. 강릉/최동열

삼척시, 1748억 조기집행

삼척시는 올 상반기에 1748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기집행한다.

시는 1분기 집행목표 대비 현재까지 부서별 조기집행 상황을 진단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기집행 상황실을 상시 운영, 매주 부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점관리해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척/전제훈

홍천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사업 조기 발주

459건 측량·설계 완료

홍천군이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홍천군은 2016년 재정 조기집행으로 집행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발주사업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착공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자체설계를 위해 10개 읍·면 시 설직(토목)공무원의 합동작업으로 지역개발, 주민숙원, 기반조성,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 사업 등 자체설계 332건(155억5500만원), 용역설계 127건(456억9600만원) 등 총 459건(721억9700만원) 사업의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조기발주된 사업은 서석면 검산2리 소명동 교량설치, 화촌면 야시대1리 말골교 확장, 내면 창촌3리 백성골 암거설치, 내면 창촌2리 논골 암거설치 공사 등이다.

내촌면 도관2리 사갑교 소교량 설치 공사의 8건은 계약 중에 있다.

전영재 홍천군 건설방재과장은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순조롭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출납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발주가 불가피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올해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유주현 joohyun@kado.net

기술제안, 수주실패시 분담금 손실부담 적어

뉴스 돋보기

중소형사, 기술제안으로 눈돌리는 이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견 및 중소기업사들이 기술제안입찰에 의욕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공건설시장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다.

공급과잉 우려로 주택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여파로 무한경쟁이나 나름 없는 기타 공공공사의 수주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계속된 재정 악화로 인해 과거 안정적인 물량으로 폄하되던 적격심사 대상 공사마저도 적정 실행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로서는 공동도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나름 계획수주가 가능하고 경쟁부담이나 수익성 확보 우려가 적은 중소기업의 기술제안입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주실패에 따른 손실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초기 시행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제안입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사 대표는 “중심제 시행 등

환경적인 변화 외에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 등 선투자비용은 공사비 1~2% 수준으로, 최소 3~5%에 달하는 턴키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다”며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규 수주영역 확대 의지가 있다면 기술제안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사예산이 같은 200억원이라도 턴키입찰을 위한 분담금 규모는 적게는 6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2억원에서 4억원 정도에 불과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제안서 경쟁을 막고자 제안 건수(50건)를 제한하고, 약소하나마 제안비용 보상규정을 시행한 것이 중소기업사들이 의욕을 갖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정부 및 발주자들이 소규모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적극 발굴해, 중소기업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17일 국토부가 개최한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경쟁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는 동시에, 기술제안입찰 대상시설을 확대해 중소기업사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복승권기자 skbong@

道, 2025년까지 지방도 정비 4992억 투자

강원도는 2025년까지 지방도 정비에 4992억원을 투자한다.

강원도는 이용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지방도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획일적인 도로 확장 개념에서 벗어나 유지·보수를 통한 도로기능 향상 및 적기 예산 투자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이동 복지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도로 기능 향상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49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1705억원이 투입된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지방도 노선 중 사리도 및 미개통구간, 주요 고갯길 터널화, 선형불량 구간 개량 등 아직 정비해야 할 구간이 많이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도내 시·군, 건설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원도 내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조기발주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홍천군은 올해 각종 건설사업을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조기 발주사업은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47억원을 비롯해 하천 정비사업 110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56억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98억원 등 총 377건, 438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군도 정비 8건, 농어촌도로 정비 17건, 하천 정비 14건, 농업기반 정비 10건, 농업 용수로 개량 41건, 마을 안길 포장 38건, 배수로 설치 40건 등이다. 또 교량 및 담거 설치 19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3건 등도 해빙이 되면 곧바로

홍천 438억·정선 591억 규모 속초·평창·춘천도 속도 높여 강릉, 재정 60% 상반기 집행 발주,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측량·설계 합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선군도 상반기 내 올해 사업 중 90%를 조기발주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도로·하천 등 총 155건, 591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선군은 조기발주를 위한 자체설계 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안전건설과장을 단장으로 5

개반, 40명의 시설직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건설공사의 측량 및 지체 설계를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속초시와 평창군도 노후도로 일제정비 및 경로당 신축·보수사업을 각각 조기발주하기로 확정했다. 속초시의 경우 올해 제5회 강원도민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동절기 종료 후인 3월부터 노후도로 포장 및 차선 도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진입구간인 동해대로, 관광로, 은천로 등 18개 노선, 59m 구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평창군은 건물노후가 심하고 협소한 경로당에 대해 신축 및 보수사업을 조기에 실시한다. 1차로 평창읍 중부3리, 용평면

노드리, 대관령면 횡계5리 등 3개소에 각 100㎡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한다. 또한 약 수리의 11개 노후경로당에 대해선 정호교체, 보일러 보수 등의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앞서 춘천시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정된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 121건, 707억원 물량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관리 46건 213억원, 도시재정비 6건 80억원, 건축관련 10건 102억원, 하천공사 5건 93억원, 지역개발 52건 75억원, 경관 6건 30억원, 도시계획 5건 22억원 등이다. 조기 재정집행을 꾀하는 곳도 있다. 강릉시는 2016년 재정 조기집행 자체 목표를 60%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 목표액 5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총 1907억원으로 일단 1분기에 80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향후 공기업 목표액이 확정되면 최종 목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통한 국가경제 활력 제고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승수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집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서민생활안정사업, 동계올림픽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3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

하도급분쟁조정 기간 연장

'60일 → 90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조정 기간이 연장되면 원하도급 간 자율적인 협의기간도 늘어나 현재보다 효율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명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실효된 지 49일 만에 재입법 됐고, 대부업법 최고이자 제한을 27.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50여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 중 건설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분쟁 조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구성하고, 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무위 관계자는 "60일이라는 기간은 관련 자료 제출과 당사자 출석, 사실 확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소 짧은 면이 있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조정 기일을 연장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성립의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된 결과를 이행하면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공사를 추가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변경 내용을 명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애초 입찰종료 후 입찰참가자에게 예정 가격과 최저가 입찰금액 그리고 최저가 입찰자 등을 공개하고, 부당한 위탁취소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금지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신설, 부당특약 설정 금지 위반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들 규정은 기업 영업기밀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와 중복제재 등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처리를 요구한 '기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지난해 말 일몰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일몰 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될 길이 열렸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 12월 말까지 이러한 이자를 상한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150여건의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현용기자

건협,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24일 개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연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사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4대 발주기관이 참여해 올해 건설사업 예산과 발주계획을 소개한다. 발주 규모와

시기 등을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민간주택 분야 침체로 건설사들이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시장에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2)3485-8307